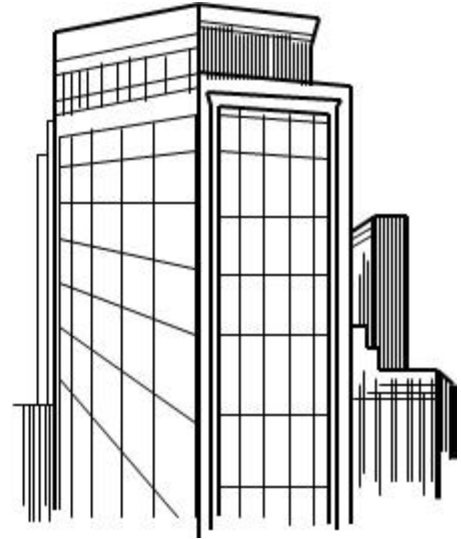


경영정보 브리핑

2022. 4. 1. ~ 2022. 4. 30.



정책이슈

- ▷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계획' 전면 수정...원전 비중 확대안 연내 내놓는다 P. 1
- ▷ 트리플펀치 맞은 한국경제... 기업들 "최악의 시나리오 짜고있다" P. 2
- ▷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 70.7% "ESG 경영 잘 몰라" P. 3

조합·유관기관 등 동향

- ▷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연대보증의무 면제대상 대폭 확대 P. 4
- ▷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공약이행 순항 P. 5
- ▷ '주차장부터 사육까지'...한전,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P. 6

금융

- ▷ 월간 경제지표 P. 7
- ▷ 4월 금융통화위원회 : 인플레이션 대응의 시급성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P. 8
- ▷ 미국 금리인상 가속 전망과 장·단기 금리역전 P. 8
- ▷ 중국 정부의 봉쇄지역 확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가중 P. 9
- ▷ 스리랑카 모라토리엄(디폴트) 선언 P. 9

경제·정책 이슈

▣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계획' 전면 수정...원전 비중 확대안 연내 내놓는다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脫원전 폐기 공식화

-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감축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4%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에 기반한 문재인 정부의 공격적 탄소중립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 방침을 발표.

2. LNG 급증이 배출량 증가 원인

- 인수위는 4월 12일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승시켰다고 지적.
- 또한, 인수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른 부담이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감축·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유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까지 평균 0.7%, 2050년까지 연평균 0.5%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라고 밝힘.

3. 원전기반 새 탄소중립 계획 낸다

- 인수위는 원전을 기초로 한 새로운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내겠다고 밝힘.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 수요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와 전력시스템 혁신'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계속운전 허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해 에너지 수급 계획을 다시 짜는 것.
- 인수위는 늦어도 올해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녹색금융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함. 그린 택소노미는 정부가 친환경 산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잇달아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한 것과 달리 한국은 원전을 제외해 논란이 되었기 때문. (한국경제, 4. 12.(화))

▣ 트리플펀치 맞은 한국경제... 기업들 “최악의 시나리오 짜고있다”

1. 고물가·고환율·무역적자... 경제 불확실성 점점 커져

-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충격이 확산되는 가운데 4월 무역 수지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 침체, 무역수지 악화 등 ‘경고등’이 잇달아 켜지는 상황인 것.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충격의 진원이 대부분 해외여서 대응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상하이 봉쇄 등으로 인한 중국의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와 식량 가격 상승 등이 한꺼번에 닥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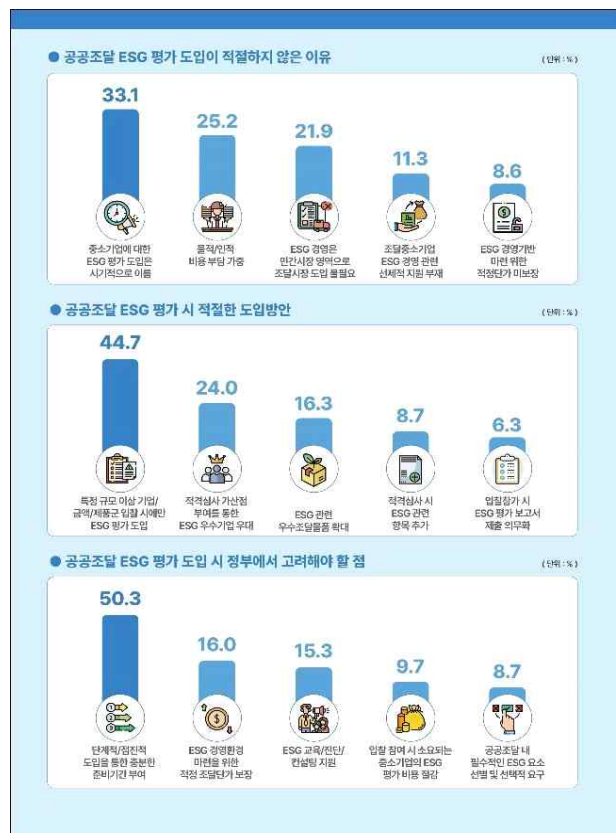
2. 비상벨 울리는 기업들

- 주요 기업들은 비상 전략회의를 여는 등 긴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한 전기차 배터리 회사의 구매팀 임직원들은 거의 전원이 해외 출장 중인데, 이는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위기 상황에서 해외 소재 업체를 방문해 공급처를 안정화하기 위해서임.
- 지난 20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한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은 “앞으로의 위기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위기와 차원이 다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나오고, 이게 다 뭉쳐져서 몰려오면 정말 큰일난다”며 계열사 CEO들에게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함. 삼성·현대차·LG 등 다른 대기업 경영진도 수시로 비상 전략회의를 열고 있으며, 한 CEO는 “외부 변수에 대한 파장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어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발언. (조선일보, 4. 22.(금))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 70.7% "ESG 경영 잘 몰라"

1. 중기중앙회, 300곳 조사..50.3% "공공조달 ESG 평가도입 준비기간 필요"

- 정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절반 이상은 공공조달 부문에 대한 ESG 평가 도입 시 충분한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요구.
-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ESG 경영 준비 및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0.7%가 ESG 경영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
- ESG 경영에 대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응답은 76.7%에 달했고,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전반 ESG 도입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50.3%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함. (연합뉴스, 4. 20.(수))



조합 · 유관기관 등 동향

■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연대보증의무 면제대상 대폭 확대

- 이달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건설 관련 보증서 등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대표자(조합원) 개인의 연대보증의무가 대폭 완화.
- 전문조합(이사장 유대운)은 5일 조합원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보증업무 등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영업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힘. 현행 전문건설업체가 전문조합에서 보증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표자 등이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필요.
다만, 공공기관이나 그 자회사, 신용등급이 높은 조합원, 보증 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 한해 연대보증 의무가 면제. 전문조합은 이 가운데 '보증 이용이 많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보증이용액이 순출자금의 5배 또는 10억원 이내인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 이를 적용하면, 전체 조합원사의 90%에 달하는 약 4만 6000개사가 연대보증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문조합을 설명.
- 전문조합 관계자는 "최근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분리하는 금융권의 변화 추세에 따라 조합도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조합원사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면서도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및 사전 관리 기능을 강화해 조합의 재무건전성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
- 이 밖에도 전문조합은 우량조합원 관계회사인 조합원사에는 수수료 할인 및 고액보증 특별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시공능력초과 보증수수료 할증제도도 개선. 아울러 타깃 영업할인 적용 대상(조합원 및 보증상품)을 확대하는 등 보증·용자·공제 등 조합이 제공하는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편의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문조합은 밝힘. (e대한경제신문 4. 6.(수))

■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공약이행 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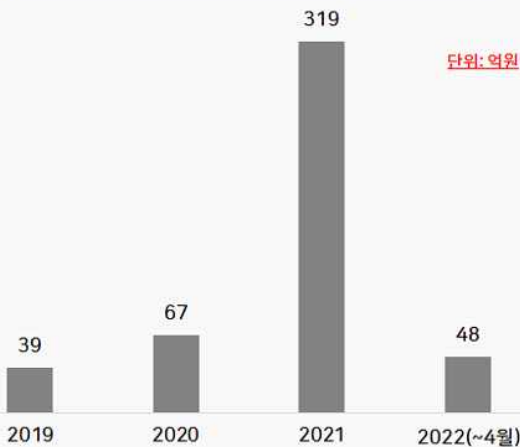
- 백남길 이사장의 공약 이행 로드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전기공사공제조합은 4월25일 서울 논현동 조합 회관에서 제2회 경영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근)를 개최. 위원회는 지난 3월14일 첫 회의 개최 이후 소위원회별 주요 안건과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결과에 대해 공유함.
- 제1소위원회는 이달 초 본부 조직개편에 이어 영업점 조직개편을 추진. 서울지점 통합에 따른 원거리 조합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량이 과중한 수도권 지점을 대상으로 영업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제2소위원회는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영업제도 개편안을 수립. 위원회는 현재 조합의 신용등급이 다소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신용등급평가 체계 정비를 의뢰하기로 함. 또 특별담보운영자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융자금 상환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의 검토를 요청함.
- 제3소위원회는 조합원 복지제도를 집중 점검. 현재 조합이 이용 중인 휴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시설 회원권을 추가 매입해 이용혜택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조합원사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존재. 현재 대전지역만 체결 중인 건강관리협회 협약을 전국 16개 검진센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 백 이사장은 또 "첫 회의 이후 소위원회별로 조합 전반의 제도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논의들이 이어져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주요 업무제도의 개선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이사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 한편 백남길 이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조합 전반의 제도개선과 공약 이행을 위해 경영혁신특별위원회를 신설. 하위에 3개 소위원회를 두고 각각 ▲기본제도 ▲영업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조합원 복지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공약 이행 방안을 구체화함.

(전기신문 4. 26.(화))

▣ '주차장부터 사옥까지'...한전,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 주차장, 아파트, 생활편의시설, 사옥, 잡종지 등... 지난해 5조원 넘는 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우기 위해 매각한 부동산 목록임.
- 2021년은 한전이 최근 10년래 가장 많은 부동산을 매각한 해였을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에 서울 강남구 부지를 양도한 2014년을 제외하고 부동산 매각으로 가장 많은 돈을 확보한 해였음. 최대주주인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산 매각은 회사채 발행과 함께 회사가 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구책.

2019~2022 한국전력공사 부동산 총 낙찰가액 추이



한국전력공사 연도별 부동산 낙찰 건수 및 금액

(출처: 온비드)

연도	입찰 건수	낙찰 건수	부동산 총 낙찰가액(원)	평균 낙찰가율
2012	22	5	585,590,010	127%
2013	9	2	400,050,000	100%
2014	41	6	10,553,566,386,600	101%
2015	7	0	0	0
2016	13	3	123,147,000	150%
2017	9	2	367,730,000	109%
2018	14	1	40,100,000	111%
2019	77	4	3,952,420,000	124%
2020	88	12	6,708,961,521	106%
2021	55	13	31,972,352,200	129%
2022(~4월)	7	2	4,847,380,000	112%
계	342	50	10,602,564,117,331	106%

- 올해도 실적 악화의 원인인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이 계속되고 있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한전의 부동산 매각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생활편의시설과 업무시설을 팔아 50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확보했고 최근 이사회는 추가 유휴 부지 매각을 결정함.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채권(한전채) 발행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한전채 발행을 마냥 늘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며 "비용 절감을 포함한 유휴 자산 매각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힘. (더벨, 4. 22.(금))

금 용

▣ 월간 경제지표

기간 : 2022. 4. 1. ~ 2022. 4. 27.

구 분	변 동 폭	4. 1 기준가	4. 27 기준가
KOSPI	▼ 300.79	2939.85	2639.06
KOSDAQ	▼ 44.39	940.57	896.18
S&P500	▼ 361.9	4545.86	4183.96
CD(91일, %)	▲ 0.21	1.51	1.72
국고채(3년,%)	▲ 1.115	1.784	2.899
회사채(3년, AA-, %)	▲ 0.137	3.458	3.595
국고채(10년, %)	▲ 0.178	3.007	3.185
미국고채(10년, %)	▲ 0.437	2.389	2.826

□ 증시

- [국내] 미연준의 빅스텝 가능성과 중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상하이와 수도 베이징 봉쇄조치로 인해 경기둔화 우려가 커져 하락 추세에 있음.
- [미국] 우-러 전쟁 장기화 속 중국의 도시 봉쇄 확산, 미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짐.

□ 금리

- [국내] 우-러 지정학적 리스크 여파로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기준금리 상승.
- [미국] 미국 물가상승으로 연준의 금리인상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 대두.

■ 4월 금융통화위원회 : 인플레이션 대응의 시급성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25bp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함. 인상 결정 배경에는 ① 인플레이션 대응의 시급성, ② 미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시사로 국내 기준금리의 선제적 인상 효과가 약화된 점 등이 작용.
- 국내경제는 민간소비가 다소 개선되는 회복세를 이어나가나 성장률은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출처: 교보증권 4.14(화)]

■ 미국 금리인상 가속 전망과 장·단기 금리역전

-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 빅스텝(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빠른 긴축 가능성을 반영한 금리의 급상승은 차입비용을 증가시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론의 근거가 됨.
- 장·단기 금리역전은 미연준의 금리인상 정책에 따른 채권시장 수급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Overshooting)하며 발생함.
(*장기금리는 투자자의 경기 및 물가 전망 반영)
- 물가 상승세가 안정되면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그에 따른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해소돼 정상화될 것.

[출처: KDB미래전략연구소 4.18(월)]

■ 중국 정부의 봉쇄지역 확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가중

-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을 무기한 전면봉쇄(락다운)해 코로나 확산을 막고 있음.
-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상하이항이 봉쇄돼 중국의 수출입이 제한되자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과 물동량 축소로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베이징 차오양구가 통제구역으로 지정, 봉쇄지역의 확대로 외국인의 투자금 회수가 증가해 중국 증시가 급락함.
- 위안화 가치도 크게 하락하며 중국의 정책 당국이 경기회복과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인민은행 외화지준율 100bp 인하와 부양정책을 발표함.

■ 스리랑카 모라토리엄(디폴트) 선언

- 4월 12일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성명문을 통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대외부채 상환을 잠정 중단함. 디폴트 리스크가 확산된 이유는 ① 많은 대외부채와 ② 자국 산업 침체에 기인함.
- 대외부채의 원인은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하며 인프라 구축을 이유로 중국에서 끌어온 차관과 유기농업화 정책으로 화학비료 수입을 금지해 주력산업인 차(茶) 생산에 큰 타격을 입음.
- 스리랑카는 인도와 중국 등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IMF와 구제금융 협상에 돌입했으나 가파른 인플레이션 상승세와 주력 산업인 관광업과 농업은 빠른 회복을 보이기 어려워 단기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